

보도 일시	2022. 12. 20.(화) 10:00	배포 일시	2022. 12. 20.(화)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윤양수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이명희 (044-203-2412)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 과감한 조직 감축으로 공공기관 혁신 선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심사제도 전면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래 콘텐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월 20일(화),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 운영과 사업관리로 문제가 되며 혁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진원 내에 ‘혁신추진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콘진원 혁신 전략을 도출했다.

① 과감한 조직 감축, 외부전문가 영입, 연구·조사기능 강화 등 혁신 추진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슬림화)한다.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축소*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대부서화로 보직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지원부서와 유사 업무 수행부서는 축소·통합**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한다.

* (현재) 전략혁신본부, 경영지원본부, 정책본부, 게임본부, 방송영상본부, 대중문화본부, 기업·인재양성본부 → (개편) 경영전략본부, 게임본부, 방송영상본부, 한류지원본부, 콘텐츠기반본부

** (현재) 보직자 수 44명, 부서 수 31개 → (개편) 보직자 수 35명(20% 감축), 부서 수 23개(30% 감축)

또한 유능한 외부전문가 영입, 내부 발탁인사 단행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능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미래전략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 강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해 한국문화(케이) 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②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심사제도 전면 개편

콘진원 정부 지원 예산은 2009년 1,533억 원에서 2022년 5,472억 원으로 3배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단절적·일회성 사업,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내외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해 지원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콘텐츠 산업의 지원군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콘진원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이 업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하고 준비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을 전면 폐지하고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을 재구성해 내년 지원사업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③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 신설 등 혁신의 상시화 추진

‘혁신추진 특별전담팀(TF)’은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계속 점검·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도 신설해 국민의 피와 땀인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진원 혁신을 필두로 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콘텐츠 기업에 낭비 없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